거리 무단방치 킥보드 견인업체 선정 하세월

조례 시행에도 불법 주정차 성행 인도 · 차도 구분 없어 '안전 위협' 자치구 "민원 적다" 계약 미뤄 "지정 장소 반납 등 의무화해야"

인도나 도로에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가 도심 골치 덩어리로 전락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민원이 적다는 이유로 견인업체 를 선정하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 기 때문이다.

1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내에는 지난달 기준 5개 공유업체가 6,570대의 전동킥 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자치구별로 불법 주정차 및 무단방치된 공유 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도록 관 련 조례를 개정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

조례안은 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주정차 된 공 유 킥보드는 민원 접수 20분 경과 후 즉시 견인

또 일반 구역에 주정차 기준을 위반한 공유 킥보드는 신고 시 대여업체가 자체적으로 수거 하고 재배치할 수 있도록 1시간의 유예 시간을 준다. 유예 시간 이후에도 방치되는 경우 각 지 자체별 견인대행 업체를 통해 견인한다.

하지만 조례개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지 만 관할 자치구는 민원이 적다는 이유로 견인대행 업체를 선정하지 않아 거리 곳곳에 무단 방치된 공유 킥보드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일 광산구 신가동의 한 도로에 는 공유 킥보드 4대가 차도 중앙분리대 근처에 불법 주정차돼 위험하게 나뒹굴고 있었다.

운전자들은 공유 킥보드를 피하기 위해 차선 을 넘나들며 아찔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를 지켜본 시민 김 모씨(19·남)는 "몇몇 이용자가 차도 중앙분리대 가까운 곳에 공유 킥 보드를 세워놨는데 나중에는 넘어져서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업체를 통해 이용

자를 찾아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는 등 업체와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무단 방치된 공유 킥보드가 늘면서 안 전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3년간(2019~2022년 5월) 광주지역에 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는 총 140 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1건, 2020년 100건의 사고가 발생해 1년 사이에 무려 5배 이상 급증 했다. 올해의 경우 5월까지 22건의 사고가 발생

전문가들은 지자체별로 공유 킥보드의 지정 장소 반납 의무화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사 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인모 호남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지정 된 구역에 주차를 해야 반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개인 이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높여야 한다" 며 "지자체도 무작정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이용자들의 사전 교육과 안전한 이용 기반 조성 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견인업체를 조속히 선 정하고 공유킥보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돼야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건수 가 낮아 위탁 대행하겠다는 견인업체가 없다" 며 "현재 5개 자치구에서는 대여업체의 조치만 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해 향후에도 견인업체를 지정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글·사진=김혜린 기자





지난 10일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의 한 인도와 도로 중앙분리대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킥보드 여러 대가 방치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알바생인데…" 편의점 금고 털어 도주

고에서 수십만원을 훔쳐 달아난 신원미상의 남 성을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아르바이트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편의점 금 보이는 한 남성이 자신을 "평일 주간 알바"라고 소개하며 찾아왔다.

당시 근무 중이던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B 1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 씨는 자연스러운 그의 모습에 별다른 의심을 하 시께 서구 금호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 20대로 지 못하고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그

러나 A씨는 B씨가 물건을 정리하러 간 사이에 편의점 금고를 열어 20여만원을 훔쳐 달아났

뒤늦게 금고에서 돈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B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편의점과 인근 폐쇄회로(CC)TV 등 을 분석해 이 남성의 행방을 쫓고 있다.

/김혜린 기자

우회전·스쿨존 횡단보도 '일시정지'

오늘부터 개정 도교법 시행

12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 로교통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광주에서는 광산구 송정로1번길이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됐다.

1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보행자 우선도로 는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가운데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 한 도로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부분을 사용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이나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생긴다. 때에 따라 통행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위반한 경우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받게 된다.

아파트 단지 안이나 주차장,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 외의 곳을 지나는 운전자 역시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 는 운전자의 의무도 확대된다. 보행자가 횡단보 도를 건너고 있을 때는 물론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이나 뛰어오는 경우, 길을 건너려고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피거나 손을 드는 경우 등에도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에 신 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다면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광주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 도는 모두 479개로 경찰은 시와 협력해 노면표 시·안전 표지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새롭 게 적용되는 법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 금 6만원과 벌점 10점을 받는다.

회전교차로의 경우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 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진입할 때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토록 했다.

앞차가 회전교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방향지 시등을 켜고 있다면 뒤차 운전자는 앞차의 진행 을 방해하면 안 된다.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1개월간 계도 · 홍보 위주의 안전 활동 기간을 거쳐 단속 에 나설 예정이다. /최환준 기자

"조선대 채용비리 교수, 업무 배제해야"

참여자치21, 피해 방지 촉구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11일 조선대학교 다. 에 채용・입시 비리 의혹 혐의로 입건된 두 명의 무용학과 교수를 당장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조선대 소속 A교수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B 교수는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돼 수사 를 받고 있다"며 "증거인멸과 내부 고발자인 피 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조선대가 하루 빨리 수업과 학사 관리 등 업무에서 두 교수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이들은 전임교원이 되기 위해 온갖 업무를 묵묵히 맡아온 제자에게 거액의 금

품을 요구했다"며 "또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제 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까지 했다"고 말했

특히 "대학 측은 이미 수년 전부터 항의해왔 던 학생들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만약 이번에 도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광주시민들은 더 이상 전국 최초 민립대학의 전통을 간직한 정의로운 사학, 지역 사회를 떠받치는 인재의 요람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단체는 "앞으로도 조선대가 지역 사회를 선 도하는 동반자로서 함께 하기를 바란다"며 "비 리를 고발한 이들이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하려면 해당 교수 2명을 당장 모든 학사행 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채민 기자

휴가철 해상 레저 안전사고 잇따라

휴가철을 맞아 해상 레저 활동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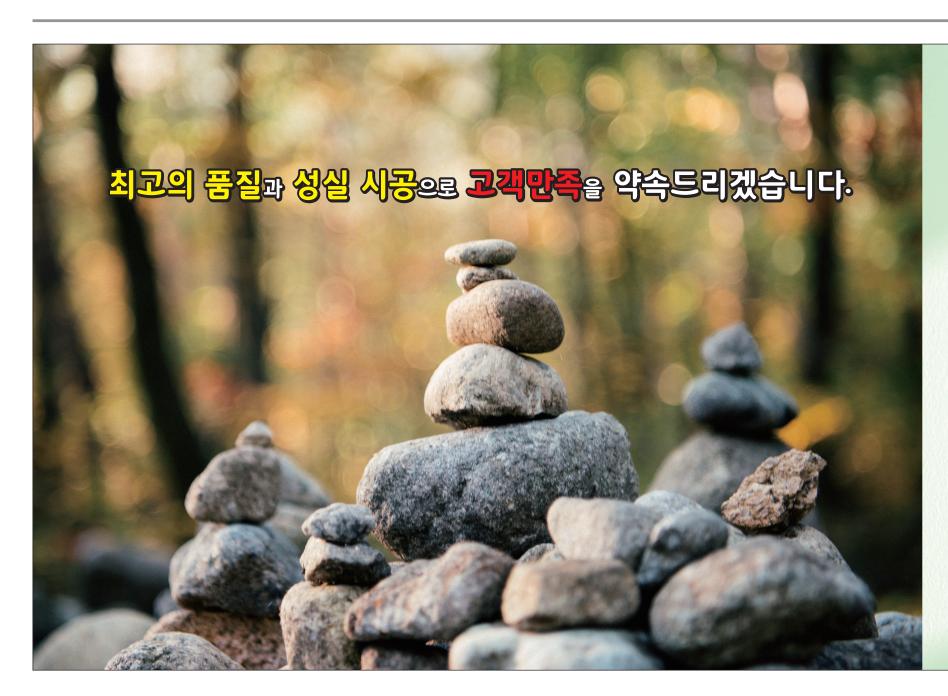
11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 전 8시 5분께 고흥군 팔영대교 인근 해상에서 9 t급 낚시어선이 암초에 좌초했다.

해경은 경비함정 등 구조대를 급파했으며 민 간 어선 등과 함께 승객 20명을 구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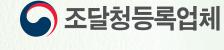
9일 오후에는 고흥군 소록대교 인근 해상에

서 모터보트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여수시 돌산읍에서도 모터보트가 시동이 걸리지 않아 해경이 긴급 출동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주말에 레저 활동객이 늘면서 해양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며 "레 저활동 선박 출항 전에 사전 점검과 함께 지리 적 위험 요소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고 당부 /여수=곽재영 기자







화장실 칸막이 실내벽체 마감패널

벽천장용 흡음재

TEI. 062) 512-6662 FAX. 062) 512-6663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330 (계림동 924)